



유럽연합 은행동맹 가능성과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독일은 유럽연합(EU) 은행동맹(banking union)¹⁾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유럽연합 은행 동맹 출범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
- 독일은 유럽연합 은행동맹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은행의 구조조정·폐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유럽연합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왔음.
- 이러한 반대 의견의 배경에는 국가 재정 및 은행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독일이 은행동맹 출범 시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.
 - 특히, 독일 은행연합회는 조속한 은행동맹 출범을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주장에 대하여 독일 예금자들의 예금으로 다른 국가들의 은행을 돕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.
- 그러나 독일 재무장관은 그 동안의 반대 입장과는 달리 5월 7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강연에서 조약 변경이 아닌 정책 조율을 통하여 은행동맹 출범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.

■ 이는 유로존 경제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 유럽연합 은행동맹을 통한 회원국들의 신용도 개선이라는 의견에 독일이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- 5월 3일 유럽연합은 2013년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월 발표하였던 -0.3%에서 -0.4%로 0.1%p 하향 조정하였고 유로존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,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5월 2일 기준금리를 0.75%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.50%로 0.25%p 인하하였으며,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.

1) 유럽연합 은행동맹은 유럽연합 내 은행들의 자금 흐름이나 유동성 위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유럽 금융기구를 의미하며,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음.

- 그러나 유럽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신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, 독일도 유로존 재정위기의 장기화가 자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됨.
- 유럽연합 은행동맹 설립 추진이 가속화 될 경우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국제통화기금(IMF) 총재는 유럽연합 은행동맹 출범을 위해서는 독일을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독일을 독려한 바 있으며, 프랑스 재무장관은 기존의 조약을 유지하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독일의 입장 선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.
 -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유럽중앙은행 산하에 범유럽 은행감독기구 설치 및 부실은행 처리 기구 설립이 논의되었고, 이번 독일의 입장 변경을 통하여 은행동맹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 - 유럽연합 은행동맹은 유럽 은행들의 신용도 개선을 통한 유럽의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,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은행동맹의 출범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실무협상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- 유럽연합 은행동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독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,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이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수 있어 은행동맹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.
 - 또한 독일의 입장 변화로 유럽연합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약의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실무적 협상과 시행 과정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한국경제 등)